

## 제3차 남북장성급회담 (3월 2일 ~3일)

#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결렬 배경과 전망

## 정 영 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지난 2월 3일 남북한은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갖고 제3차 남북장성급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장성급회담이 3월 2일과 3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제2차 회담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갖는 회담이기에 이번 장성급회담은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나 회담은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은 지난 2004년 5월과 6월 연이어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남북 양측은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 중지, 선전수단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4개항의 합의를 발표할 바 있다. 이 회담에서 남북한 군사 실무자들이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 군대 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한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들을 제거하는 데 합의하게 된 것은 한반도 군사문제의 남북 당사국간의 해결이라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실무대표회담이 수차례 개최되었으나 공전만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 차원의 당국간 회담이 개최될 때 마다 남북군사회담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남북 장성급 회담을 비롯한 군사회담 개최를 촉구하였다. 작년 6월 제15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합의하고 이를 위한 몇 차례의 실무대표회담을 가졌다. 9월과 12월의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도 남북 장성급회담 개최를 재확인하고 새해 2006년을 맞았다.

남북 군사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 접촉 결정은 제3차 장성급 회담 개최를 통해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하였다. 작년의 경우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장관급회담과 경협위 등 남북 당국 간 회담에는 비교적 호응을 보였으나 군사부문에서의 남북대화는 가급적 지연시켜왔다. 반면 올해 북한이 처한 대외적 환경은 작년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북군사회담 개최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9월 이후 미국은 북한의 '위폐제조' 문제를 들어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대북압력의 수준을 높였다. 이로 인해 북한은 상당히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서 북한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 중의 하나는 남북대화의 활성화이다. 남북대화의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이제까지 북한이 견지해 왔던 경제 실리추구형의 대화태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이 남북 군사대화를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이번 제3차 장성급 회담에서 원론적 주장 관철노력에 집중한 결과 회담은 자연 결렬되고 말았다. 서해상 충돌방지 개선조치와 공동어로 설정문제를 우선적으로 토의하자는 우리 측 제의를 뒤로하면

서 북한은 서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근원적 조치’를 먼저 취하자고 주장함으로써 회담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로막았던 것이다.

김영철 북측 단장은 기초발언에서 기존의 북방한계선(NLL) 대신에 해양법 등 국제법과 정전협정에 따른 해양경계선 확정을 제의한다는 ‘근원적 조치’를 내놓았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측은 “정전협정에는 정전상태를 유지하고 충돌재발을 막는 요구가 반영돼 있다”며 “해양법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는 등거리, 공정성, 합의, 자연현장의 원칙 등 해양경계선을 확정하는 데 지켜야 할 원칙과 방법이 규제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북측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효화 하고 새로운 서해경계선 획정 논의를 위해 남북 장성급 회담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북한 역시 북방한계선(NLL)의 무효화 목표가 단기간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북한은 NLL 관련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NLL 재 획정 요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굳혀 나가려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NLL 재 획정 문제를 공론화시켜 ‘우리민족끼리’ 해결이라는 담론 분위기를 성숙시켜 이를 대남전략전술에 활용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NLL에 대한 ‘근원적 조치’를 고집함으로써 남측의 남북군사회담 개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NLL 재 획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고착시켜 나간다는 전략차원에서 이번 제3차 장성급 회담을 결렬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향후 북한은 우리측의 NLL 고수 입장을 충돌재발방지를 규정하고 있는 ‘정전협정과 국제법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난하면서 새로운 서해해상 경계선을 획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확산시켜나가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군사회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북방한계선 재 획정 관련 주장은 대남전략전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관할구역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남북한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군사회담 개최요구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남북군사회담 없이 여타의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없다는 점을 이해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향후 군사회담은 포괄적인 회담 개최에 주력하기 보다는 세부의제 중심의 남북군사 대화를 위한 의제 개발과 회담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NLL 관련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근원적 조치’에 대해서 거부 입장을 견지하면서 방어적 논리 보다는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을 당당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NLL 관련 원론적인 문제와 분리해서 다른 세부적 의제별 남북군사회담을 각론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